

광주시, 2030년까지 기술·미래 인재 81만명 양성

교육·산업·공공기관 등 87곳 ‘2030 광주 인재양성전략 보고회’
AI·반도체 등 산업기술인력 집중 육성… 지산학연 생태계 강화

광주시가 인공지능(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의 성장을 이끌 산업기술 인재와 미래교육 기반 인재 등 오는 2030년까지 총 81만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광주 실험관컨벤츄리(GCC) VX스튜디오에서 교육계, 경제단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 87개 기관·단체와 함께 ‘2030 광주 인재양성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인재와 함께 발전하는 광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광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주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남대·조선대·광주대·호남대·GIST 등 지역대학과 직업계 고등학교·광주인력개발원 등 교육기관,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광주산학연협의회 등 경제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등 금융공공기관, 광주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지방노동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주시·자치구·의회·교육청 등 지방행정기관, 산업계 등 87개 기관·단체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LIGHT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인공지능(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을 이끌 산업기술인력 35만명 ▲미래교육도시 기반 확산을 위한 인재 46만명 등 오는 2030년까지 총 81만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광주시는 유·초·중·고부터 대학·대학원, 실무 전문으로 이어지는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인공지능·디지털·반도체·문화콘텐츠 등 광주시의 핵심 전략산업에 연계한 교육·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인재·기업의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실무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이 부족해 당장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산학연 거버넌스체계를 강화하고, 광주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정착하는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실현을 위한 시범 사업인 광주 우수인재와 혁신기업의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과거의 기업들은 ‘누가 광주까지 가서 인재를 양성하느냐’는 말을 들었으나 이제 기업들은 ‘인재 때문에 광주에 간다’고 말한다”며 “300여개



의 AI기업이 광주를 택했고, 기업들은 광주를 택한 동인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인재라고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결국 인재를 키워 광주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인재가 힘이다”며 “더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이 인재를 찾아 광주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일궈온 성과를 돌아보고 2030 인재양성 전략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산학연 87개 기관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LIGHT 인재’를 함께 키우자”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 윤희진 에이직랜드 팀장, 이선관 게스트페이스 대표, 김

수형 전남대 AI산업단장, 손윤철 조선대 반도체융합학과 교수, 김성철 광주인력개발원 그룹장, 김대태 광주형마이스터고 교감, 박성진 GCC사관학교 교육생, 송자연 늘봄마인드 대표(AI사관학교 수료생) 등 10개 교육기관과 기업, 교육생 대표가 영상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끌 인재양성 노력과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정재평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선미정 광주시 대학정책팀장, 서형섭 광주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이 ▲우수한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정착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등 81만명의 인재양성을 통한 광주발전을 다짐하는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17개 기관·단체 대표들이 결의서에 서명했다.

임채일 기자



광양경자청, 인도네시아 투자유치단 활동 전개

핵심소재 공급망 연관기업 투자설명회 및 특별경제구역 업무협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지역을 방문하여 핵심소재 공급망 연관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 활동은 인도네시아 투자전방산업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Downstream Industries) 방문 차관 면담, 한인상공회의소 간담회, 인도네시아 글로벌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바탕(Batang)과 그레스릭(Gresik) 특별경제구역과의 협력방안 논의 등을 펼칠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인도네시아는 니켈, 알루미늄 등의 핵심광물과 에너지, 목재, 고무, 팜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약 2억 8천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아세안 중심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활동은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철강, 화학분야의 산업발전 경험과 기술,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노동력을 잘 활용하여, 양 지역이 투자와 산업 협력에서 상생 발전 계기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확대로 인력난 숨통

목포서 행안부·법무부·업계 등과 취업활동 규제개선 토론회

실적, 성장 가능성 등을 소개하며, 전략적 합작투자와 글로벌 유통망 확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는 식품기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투자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유망 식품기업이 케이-푸드를 선도하도록 수출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전라남도는 농·어업 분야 등 인력난 해결을 위해 11일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개선 토론회를 열어 계절근로자의 활동 분야와 광역 비자사업 체류자격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하고 법무부와 22개 시군,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신안천일염생산자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어촌 등의 단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남 등록 외국인 수는 57만 명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등록 외국인 증가율은 74%로, 전국 1위이며 최근에는 매년 1만 명정도 신규 외국인이 등록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현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활동 관련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으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순모 굴수하식수협 여수지소장은 ‘가리비’, ‘명게’와 달리

‘굴’ 해상양식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설명했고, 최석대 천일염생산자협회 이사는 봄부터 가을까지 생활동이 이뤄지는 소금 생산이야말로 계절근로자 도입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가 건의한 광역형 비자사업 대상에 ‘계절 근로자 도입’과 ‘전남형 가족단위 이민 비자 신설’ 등에 관한 법무부와 전남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지역 농·어업인의 고령화, 지역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심화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활동 범위뿐 아니라 체류·복지·인권 등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및 조선업 인력난 해소 규제개선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농·어업 분야 인력수급 애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를 해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종팔 기자

전라남도는 13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25)’에 유망 식품 수출기업 4개 사와 함께 참가해 수출 확대 및 해외 투자유치를 타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아시아 4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며 활발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대규모 국제 B2B 박람회다. 올해는 51개 국 1천600여 기업과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전남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 수출·투자유치 타진

유망 식품기업 4개사 참가해 제품 소개·투자상담회 진행

전남도는 박람회 기간 식품 부스 4개를 설치해 도내 참가 기업의 주력 제품을 집중 홍보하고, 해외 기업과의 합작 투자 가능성도 함께 타진했다.

참가기업은 ▲정식푸드(고구마말랭이) ▲해농(도시락김·김밥김) ▲바다손에(김부각·건미역) ▲남도소반(해조류 페스토·오징어 튀김스낵)이다. 국내외 바이어 및

유통사와 활발한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판로 개척과 케이(K)-푸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박람회 첫 날인 지난 10일 글로벌 벤처캐피탈(VC) 5개사를 초청해 식품 수출기업과의 1대1 투자 상담회를 열었다.

상담회에서는 제품 경쟁력, 해외 수출

광주 경비·청소 노동자 “새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소상공인 사업주는 “손실 보상, 카드 수수료 인하, 공과금 감면”을

이재명 정부에 광주지역 편의점·경비·청소미화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들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12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 501명,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은 84.8%로 지난해 대비 2.1% 낮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준수율이 98.9%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이 73.6%로 가장 낮았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편의점·마트·음식점·카페·판매·경비·청소미화·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146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기

준법 전면적용’ 122건, ‘비정규직 사용제한’ 93건, ‘사회보험 적용 확대’ 71건 순으로 요구했다.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 수수료 인하’ 59건, ‘공과금 감면’ 57건, ‘대출 연장’ 50건 순이다. 연차휴가·연장근로

수당·주52시간제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가 49.5%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주는 ‘현행대로 해야 한다’가 25.7%로 가장 높았다.

‘만 60세 정년 연장’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72.9%, 64.3%가 찬성했다. ‘2026년도 희망 최저임금’은 노동자 26.7%가 300~400원 인상을 요구했으며 사업주의 경우 68.4%가 ‘동결’을 선택했다. /우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를 곡성